

# 육계 의무자조금사업 추진 현황

육계자조활동자금공동준비위원회

## 1.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

한국계육협회, 대한양계협회, 농협중앙회 등 3개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육계의무자조금은 출발 전부터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인 것이 육계산업의 특성상 누가 자조금 거출 대상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어느 사유규모까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타 축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육계의무자조금의 시행이라는 큰 목표아래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져 지난 2004년 11월 15일 1차 육계자조활동자금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 개최했다.

하지만 우리 업계에 있어 최대의 딜레마인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05년 8월 25일에야 2차 육계자조활동자금공동준비위원회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 2. 대의원 선거

연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아래 바로 대의원 선거준비에 돌입, ▲2005년 9월 9일까지 시·군별 대의원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했으며, ▲9월 22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고와 아울러 선거인 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토록 했다.

▲대의원후보자 등록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4일(후보자 미달 시는 10월 5~7일)까지였으며, 전국 각 시·군을 통해 조사된 4천여 축산업자를 대상으로 76개 선거구에서 대의원후보자등록을 받았다.

▲대의원 선거는 10월 24일에서 10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하여 모두 1백35명의 대의원이 확정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초 76개 선거구에서 총 1백50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후보등록 결과 4명이 배정된 충남 홍성 및 경남 김해선거구에서 후보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는 74개 선거구에서 1백46명의 대의원후보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결과 4천1백65농가 중 2천5백51농가가 투표에 참여, 전체 농가수 투표율이 61.3%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투표율은 지금까지 의무자조금사업이 출범한 어느 축종보다도 가장 높은 기록이다.

특히 1백35명의 대의원 중 농가수 투표율만

으로 1백34명의 결정됐으며 사육수수 투표율로 선출된 대의원은 경북의 영천·경산·대구·청도 통합선거구의 1명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기도 4개 선거구(평택, 김포, 양주, 연천)와 충청도의 1개 선거구(홍성), 전남 1개 선거구(광주) 등 6개 선거구의 경우 농가수는 물론 사육수수 투표율에서도 대의원선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투표 미 실시 선거구와 함께 대의원 선출에 실패한 선거구는 8개선거구로서 아쉬움을 남겼다.

각 지역별 선출 대의원수와 투표율은 경기 26명(51.1%), 강원 5명(57.3%), 충북 9명(60.4%), 충남 30명(63.9%), 전북 27명(62.2%), 경북 11명(75.2%), 경남 7명(63%), 제주 1명(62.2%)으로 경북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반면 경기도가 다소 낮았다.

▲선거준비가 다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육계자조금사업에 거는 기대와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3. 대의원 창립총회 개최

육계자조금 대의원 선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5년 12월 23일 육계자조금 대의원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호남지역의 폭설 등의 영향으로 대의원 정수의 2/3를 채우지 못해 아쉽게 대의원 총회를 유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날 대의원 총회 유효 정족수는 100명이었으나 유회 선언 시까지 참석한 대의원 수는 95명이었다.

### 4. 결론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은 무임 승차자를 최대한 배제하고 국내 육계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작하는 사업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니, GOTT 협정이니 하는 과정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직접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접지원을 통해 농가에 나아가서는 국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이 또한 무한정 정부당국의 지원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다. WTO 규정에는 자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자조금 사업이 생산부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보조감축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육계자조금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내 육계산업이 정상에 올라야 하는 중





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이미 국내 육류소비시장은 일정궤도에 올라 있다. 과거에는 단백질 공급량이 부족하여 빠른 속도로 소비량이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는 육류의 소비를 늘리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확보된 소비시장에서 돼지고기, 쇠고기와 경쟁을 하며 닭고기 소비시장(단백질 공급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 육류에 비해 월등한 닭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홍보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돼지고기, 한우 업계가 이미 의무자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육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육계자조금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국내 닭고기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육계 자조금 사업은 자조금 사업 그 자체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빌미로 각자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또 다른 당사자의 저항감을 불러오게 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혼란을 가중시키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육계자조금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각자에게 바람직한지 검토작업을 가져야 한다.

어느 정도의 거출금이 적당한지, 물론 법의 취지는 최소의 금액을 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을 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육계의무자조금은 한국계육협회를 비롯한 대한양계협회, 농협중앙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자조금 사업이 어느 특정단체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조금은 우리 육계산업의 활로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육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대의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각 계각층에서도 어느 정도의 양보도 감수해 가면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자조금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육계 및 닭고기사업이 반석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자조금 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이럴 때 건실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